사 람 사 랑

회원통신 제29호(97/5/20)

****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interpia.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17년의 세월, 광주는 지금도 앓고 있다

* 80년 당시 7살의 조사천씨 아들 조천호군(오른쪽)과
아버지의 무덤을 이장하는 현재의 모습(왼쪽)

머리글

스스로 고통이 되는 운동의 복권을 위하여

서준식 (대표)

'문민' 시대의 두드러진 통치성과 중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서슴없이 운동의 급속한 '체제내화'를 꼽겠다.

70, 80년대의 굵직한 '좌경분자'들은 어이없게 '제도' 속으로 흡수되어 가거나 혹은 '민중' 대신에 '시민'을 즐겨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상업매체들은 때때로 산뜻한 정장 차림의 운동단체 기자회견을 크게 보도했으며 정무장관실이나 대기업들이 운동을 '협찬'하기 시작했다. 요즘 운동단체들도 이런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런 현상은 누가 뭐라 해도 입 밖에 내기가 꺼림칙한 말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 즉 '운동의 체제내화'이다.

원래 운동의 체제내화는 동시에 운동의 '계급분화'를 의미한다. '현장'의 아픔을 자신의 삶 그 자체로 삼는 운동가들, 고집스럽게 '민중'을 외치는 운동가들은 여전히 카메라 조명을 받지도 못하고 70, 80년대에 대중으로부터 획득했던 존경 마저 '잘 나가는' 운동단체에 빼앗겨버렸다. 사람들은 이들에게 말한다. "아직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운동의 체제내화'가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서 운동의 대중화'다."라는 주장은 나에게 자기기만 처럼 들린다. 무슨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운동의 요인은 분명 사라지지 않았으며, '민중'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시민'이 된 것도 아닐 터이다. 우리 시대는 변함없이 물리적·이데올로기적 계급지배가 관철되어 있으며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는 지금도 우리의 머리 위를 무쇠솥처럼 짓누르고 있지 않은가? 대중이 겪는 고통의 가장 깊은 원인에 대하여 말을 아끼는, 그런 운동이 획득하는 '대중성'이란 사실은 '대중성'이 아니라 '대중영합'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나라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70, 80년대 우리 운동을 "닭이 세번 울기 전에" 배신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운동의 지향점은 '변혁'이요 '반체제'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처럼, 요즘 우리 운동은 변혁, 진보, 심지어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말 까지도 "모른다"고 한다. 왜? 감히 나는 말한다. 그것은 돈의 힘 때문이라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기쁨으로 몇몇 사람이 모여 단체를 만든다. 그러나 참으로 두렵고도 두려운 것은, 조직이라는 것은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 부터

그 자체의 '생존논리'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다. '해야할 일(말)'이 도처에서 조직의 생존논리에 제압 당할 때 본과 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보편화 되고 운동은 일종의 대중 기만을 감행하게 된다.

기업이나 정부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돈을 줄 리 만무하다. 그것을 갈등 없이 받는 운동단체는 많지 않다고 믿고 싶지만 '가능한 한 자제'하되 받기는 받는다는 분위기는 분명히 일반화 되어 있다. 이 돈이 운동을 길들이게 됨은 명백하다.

가장 건강한 방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액·다수의 회비는 어떤가? 운동의 왜곡은 여기서도 어김없이 일어난다. 정치권력과 이 사회구조의 대수혜자인 거대 언론들은 대규모 장비를 통해 자신의 이익에 따라 국민들에게 때로는 거짓을 보이고 때로는 환상을 보인다. 대중의 후원금에 의존하여 조직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 대중을 향한 발언 수위를 이 '만들어진' 상식에 일정하게 맞출 수 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단체와 거부하는 단체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은 깊어만 간다.

관변단체나 체제내로 흡수되고자 하는 단체가 아닌 이상 운동단체는 결국 비참한 재정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운동의 숙명이요 영광이다. 일년에 '몇억'이라는 활동비 지출, 깨끗하고 넓은 사무실, '활동비'가 아닌 '월급'으로써 가족을 부양하는 활동가…. 이런 것은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에도 없었고 70년대, 80년대 운동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환상에 지나지 않다. 불의에 대하여 힘을 모을 수 있는 희망의 연대는 단체간의 '규모'의 경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려움과 금욕 속에서 서로 동지로서 아낄 수 있는 운동풍토에서만 온다는 군사정권 시절의 벅찬 경험을 지금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운동가의 재산은 현실을 넘어서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와 꿋꿋한 헌신뿐이다. 그리고 운동단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 시대를 사는 민중들이 진실을 꿰뚫어 보고, 말하고, 힘을 모으기 위한 희망의 물리적 근거로서 기능하는 데 있다. 운동단체에 필요한 것은 결코 '규모'가 아니다. 고통에 가득찬 세계에서 마치 고통이 없는 것 같은 허구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고통이 됨으로써 이 세계와 이 세계에서의 삶을 증언하는 용기"인 것이다.

(이 글은 <한겨레 21> 5월 7일자에 게재된 컬럼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무제지적이라고 평가해서 다시 함께 읽었으면 바램으로 이 면에 싣습니다)

** 사과드립니다: 지난 호 머리글 중 "그런데 운동의 상층부르조아가 이른바 권력을~"은 "그런데 운동의 상층부로 올라가 이른바 권력을~"로 바로 잡습니다. 편집진의 실수로 김형태 운영위원님의 글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

사 / 업 / 보 / 고

(97년 4월 셋째주부터 5월 둘째주까지)

****

혜화동 이사 대장정 마쳐

-2톤 트럭 6대, 짐정리만 4일간-

지난 4월 26일 예정대로 갈월동에서 혜화동으로 이사왔습니다. 이번 이사는 '대장정'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짐(2톤 트럭 6대)을 갈월동에서 3층 밑으로 내리고, 혜화동에서는 다시 4층으로 올리느라 연인원 50여명이 동원된 거사였습니다.

이번 이사는 사실상 4월 10일 중도금을 치룬 다음부터 진행되었는데, 실무자들은 이틀에 걸쳐 직접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먼저 자료실부터 옮겨 서가부터 배치했습니다. 자료실의 자료와 책만도 2톤 트럭 2대가 훨씬 넘었습니다. 4월 26일 당일에는 서초동 정성광 변호사 사무실에서 집기를 다시 한 트럭 더 싣고 오는 등 서둘러서 이삿짐을 옮긴다고 했지만, 혜화동에 짐을 푼 것이 오후 2시에서야 겨우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많은 이삿짐을 배치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짐은 많고 공간은 지난번보다도 작고, 현실적으로 매우 고심스러운 작업이 되었지만, 결국 그날은 대강의 큰 배치만 끝내고, 다음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조금씩 짐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짐정리하기 4일만에서야 지금의 사무실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국 사람들은 앞으로 다시는 이사를 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5월 9일 집들이 성황리에 마쳐

지난 5월 9일 오후 7시 30분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의 혜화동 시대를 알리는 집들이 행사를 마쳤습니다. 돼지 머리를 상 위에 올려놓고 고사를 지냈고, 참석해주신 분들과 함께 즐겁게 음식과 술을 나누며 앞날을 기약했습니다. 다음은 집들이에 참석해주신 분들입니다.

김형태 강경선 운영위원, 이두균 임방규 권낙기 등 장기수 선생님, 임기란 권오헌 등 민가협 회장단과 남규선 총무 등 실무자들, 백승헌 민변 사무국장, 김거성 목사, 윤혜경 영화제 집행위원, 천주교인권위원회 오창익 사무국장과 실무자, 전국연합 김현배씨 등 실무자들, 김지영 선생님, 임삼진 녹색교통운동 사무국장과 부부, 이창수 한국국제문제연구회장과 실무자, 불교인권위 조혜은 간사, 정보나눔이 학생들 등 수십명이 좁은 사무실을 늦은 시간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어린이권리 조약 책자 드디어 세상에

'어린이·청소년 권리연대회의'가 준비해온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책자가 드디어 세상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란 제목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어린이 모습을 표지로 담은 이 책에는 1부에는 노혜련 교수(숭실대 사회사업학), 이기범 교수(숙명여대 교육학), 이용교 교수(광주여대)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의 글이 실렸고, 2부로 정부의 보고서와 민간단체 보고서, 어린이와 함께 읽는 조약이 실렸습니다.

이 책을 만들기까지 영문판과 한글본을 꼼꼼이 대조, 교정을 봐주었던 연세대 교육동아리 여름의 배경내, 박보영씨, 서울대 미대 산업디자인학과 이용신씨등의 표지 디자인 자원봉사가 어우러졌습니다.

한편, 5월 2일 아동권학회 창립심포지엄에서 이 책을 소개하였고, 이날 저녁에는 사랑방 사무실에서 출판사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 연대회의 담당자들, 연대회의 공동대표이신 이오덕 선생님 등을 모시고 조촐한 책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데이타베이스 5월중 완성

데이타베이스 입력 작업이 5월 15일 현재 60% 가까이 진척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5월중으로 데이타베이스는 완성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지금까지 작성된 워크시트를 하나하나 꼼꼼이 검토하면서 교정을 보고, 교정이 끝나는대로 다시 입력하는 과정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타베이스의 완성은 인권운동의 전문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한 차원 높은 정보의 제공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자료의 제공이 훨씬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이후 데이타베이스를 통신 공간에 제공하는 일과 가공사업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정보나눔이'등 자원봉사 밀물

대학생 자원봉사자 그룹인 '인권운동대학생연대' 소속의 정보나눔이가 지난 5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사랑방과 결합하여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3명이라는 젊은 대학생들은 이화여대, 서울대, 한신대, 숭실대 등의 학생들인데우선은 자료실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서관 등을 뒤져 자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일, 워크시트 작성이나 입력작업을 개인당 1주일에 3시간 정도씩을 할당해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성공회대 학생 5명도 새로이 이번 학기 자원봉사자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연대사업>

경기여상 대책위 참가

지난 3월 10일부터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기여상의 정상화를 위한 사회단체 공동대책위가 지난 5월 9일 결성되었습니다. 이 공동대책위에는 우리를 비롯하여 천주교사제단, 천주교인권위원회, 전국연합인권위, 참교육학부모회 등 6개 단체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결성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학교와 교육청 등을 방문하여 학생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 힘입어 서울시교육청이 경기여상에 관선이사를 파견하기로 하는 등 경기여상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과거청산국민위, 인권피해신고센터 개설

과거청산국민위원회가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전, 노 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자마자 19개 단체 연명으로 5,6공 잔재의 완전청산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5월 15일에는 1980인 선언을 조직하여 발표하였고, 5,6공 인권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제1회 인권피해 증언의 장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 17일에는 종묘공원에서 전국연합, 민주노총과 함께 5.18 17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과거청산국민위는 이후 6월항쟁 주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작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동정>

서준식 대표 방독; 서대표가 지난 14일 출국, 독일로 향했습니다. 서대표는 재독양심수후원회 등 동포단체들이 매년 개최하는 5월민중제에서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며, 런던 등을 거쳐 오는 29일 귀국합니다. 한편, 서대표는 5월부터 6개월간 한겨레21의 컬럼을 쓰게 되며, 첫 번째 컬럼은 머리글에 실렸습니다.

곽노현 운영위원 5.18시민상 수상; 5.18특별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곽노현 운영위원이 박연철 변호사와 공동으로 5월 17일 5월시민상을 수상했습니다.

<자료- 성 명 서>

12.12, 5.18 내란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5,6공 청산에 나서자!!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12.12 및 5.18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였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하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억지 논리를 최종적으로 뒤엎은 것이며, 신군부 세력을 폭동세력으로 규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후 17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두차례에 걸친 불기소 처분, 국민들의 줄기찬 투쟁 그리고 그에 이은 5.18 특별법 제정, 그리고 재수사와 기소라는 우여곡절 끝에 얻어진 결론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등이 학살과 내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미에서 일단 이를 환영한다. 그러나, 내란종료시점을 2심의 1987년 6월 29일이 아니라 1심과 같이 비상계엄해제일인 1981년 1월 24일로 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쿠데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헌법적 행위가 모두 무효이고 또한 쿠데타 권력에 저항한 열사 등 국민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했어야 한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한 내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국회는 5, 6공 치하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써 5.18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5.18 학살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루어졌고, 이에 따라 광주의 현장에서 몇 명이 죽었으며, 어떻게 죽어 갔는지 실체적 진실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5.18학살에 대한 진실이 다시 묻혀지고, 피해자들의 원한이 그대로 잊혀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우리는 앞으로 광주학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을 정부와 사법기관에 촉구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한 사면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 노 등 학살과 내란의 주범과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들의 힘에 편승,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민주주의를 짓밟은 이들이 주장하는 사면론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반역사적인 망언이라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김영삼 대통령 측근에서조차 구체적인 사면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신문기사를 접하면서 당장 이런 논의와 검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더욱이 5.18 기념일 제정과 사면을 맞바꾸려는 일부의 기도는 5.18민중항쟁을 모욕하는 일로 용납할 수 없는 발상임을 분명히 밝힌다.

김영삼 대통령은 벌써 여러 차례에 걸쳐 사법처리된 부정부패와 비리 주범들을 사면하였다. 이런 사면은 결국 오늘날의 한보사태, 김현철씨 사건을 배태한 근본원인이 되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권은 절대적이거나 무제한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면권은 양심적인 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수에 대한 사면은 외면한 채 학살과 내란의 주범들만 사면한다면, 이는 사법정의를 행정부의 수반이 훼손하는 권한 남용이며, 국민들의 법감정을 외면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한 짓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을 사면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겠다는 말을 뒤엎는 식언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사실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김영

삼 대통령이 먼저 이들에 대한 사면 불가 입장을 천명할 것을 요구한다.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 경우 그 또한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청산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5,6공 정권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그 기간에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단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사법적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5,6공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역사적인 사업에 민간, 정부, 국회, 사법부가 다 같이 나서야 한다. 이는 반드시 과거청산만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창조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80년에 일어난 삼청교육대사건, 언론인 해직사태 등 불법적인 집권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5,6공 시절 발생한 의문사, 고문사건, 조작간첩 사건, 강제징집 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인권유린의 진실을 규명하고 이들에 대한 사법적인 재심을 보장하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내란세력의 집권도구이자 불법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악법과 제도도 개폐해야 한다.

이럴 때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의 정신은 살아날 것이며, 이 땅에서 정의와 희망이 자리잡을 것이다. 우리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힌다.

<우리의 주장>

1. 여·야 정치인들은 12.12, 5.18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사면 불가 방침을 조속히 천명하라!!
1. 정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서훈을 치탈하고, 5.18기념일을 제정하라!!
1. 국회는 5, 6공 치하에서 일어난 각종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배상,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정부는 즉시 5,6공 치하에서 이루어진 각종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가칭 진실규명위원회를 구성하라!!
1. 정부는 5,6공 치하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라!!
1. 정부는 5,6공 하에서 제정, 개악된 각종 악법을 개폐하라!!
1. 5,6공에 영합하여 자신의 영달을 꾀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퇴진하라!!

1997년 4월 18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 한국노동운동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서울연합, 인천부천연합, 경기남부연합, 대전충남연합, 전북연합, 대구경북연합, 경남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연합, 제주연합, 충북사회민주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월혁명연구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사랑방 3월 재정보고
(4/16-5/15)

전기이월:	-570,807원		
수입		**지출**	
회비	1,597,800	활동비	3,725,000
구독료	2,236,500	사업비	80,000
후원금	4,630,000	발송비	641,790
사업수익	281,380	사무비품	226,240
은행이자	1,059	사무실유지	827,318
기타수익	1,670	자료구입	85,000
		식대(야근)	20,500
		전화요금	795,640
		사무기기	95,400
		복사비	307,600
		기타	2,067,720
수입총액:	**8,748,409원**	**지출총액:**	**8,872,208원**
최종결산:	**-694,606원**		

<4월 **자문 · 운영위원 회비**>(가나다 순)

[redacted]

(표기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 *이사 때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과 급한 돈을 빌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 -

[redacted]

◆ *비상!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밀린 회비 좀 청산해 주십시오.*

회비가 너무 안 들어옵니다. 아래의 구좌로 밀린 회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월말에 맞춰서 사무국에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좌 안내>

[redacted]

예금주: 서준식